

2021년 미국 노동시장 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1년 1월 미국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더 신규 행정부 간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목격하였다. 헌법에 의해 1월 20일로 정해진 대통령 취임식 2주 전만 해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지지자 앞에서 근거 없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자, 지지자들은 “건물을 탈취하자”라고 외치며 당시 대통령 선출의 최종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해 상하원 의원들이 합동회의를 개최 중이던 국회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최고 공직자 3인 중 2인인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안전이 확실치 않았다. 다행히도, 해 질 무렵에 추가 병력과 경찰이 투입되면서 질서가 회복되었고 난입한 시위대 전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으로 인해, 하원은 사상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만에 두 번째로 탄핵하기에 이르렀으며, 상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심의하였다. 2021년 1월 중순 현재, 상원의 심의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¹⁾ 그러나 조셉 바이든 주니어(Joseph Biden, Jr)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선거 부정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선거를 둘러싸고 지속된 논란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당면한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11개월 전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1) 편집자 주: 2021년 2월 13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

현재 사망자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인구 비중은 전 세계의 4%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다. 2020년 2분기에 GDP는 33% 급감하였으며 민간 노동력의 6.9%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입장과 주요 방위 문제에 관한 동맹국과의 협력관계에서 기존의 미국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넷째,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선거 유세 기간과 선거 후 취임까지의 정권 인수기간, 그리고 취임 후 현재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사항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혔다.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억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1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과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리는 행동해야 하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라고 강조하고 1조 9천억 달러(한화 약 2,135조 300억 원)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하였는데, 코로나19 관리에 4천억 달러, 직접 재정지원에 1조 달러 이상, 지역사회 및 기업 지원으로 4천억 달러가 편성되어 있다. 이 부양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분명히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인생 전반을 노동자의 ‘존엄과 자존심(dignity and integrity)’ 회복에 전념해 온 인물이며, 친노동 성향이 강한 법안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책에서도 병가 및 가족휴가의 확대, 아동 돌봄 제공자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 수업 재개 지원금 등과 같이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부양책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심지어 취임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되돌리는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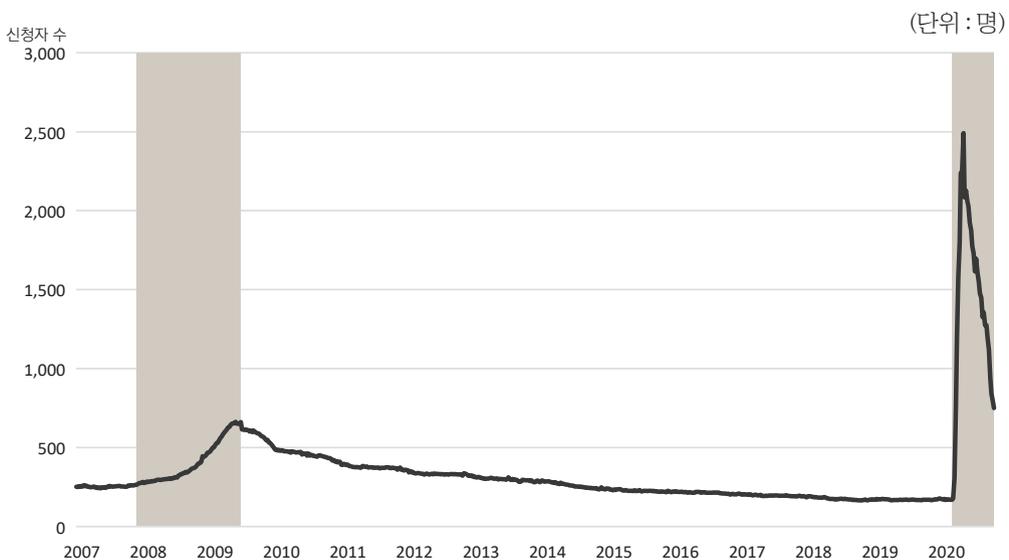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점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천 3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1개월이 지났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기는커녕 폭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매주 23만 명 이상으로, 1주간 사망자는 4천 명에 육박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여러 주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술집, 식당, 영화관 등과 같이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필수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외출금지(stay at home)’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한 공식 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식료품점 이용까지도 삼가고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학교(초중고)와 보육시설도 휴업에 들어가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두고 직장에 나가 일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영업정지 및 외출금지령 시행은 주정부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통일된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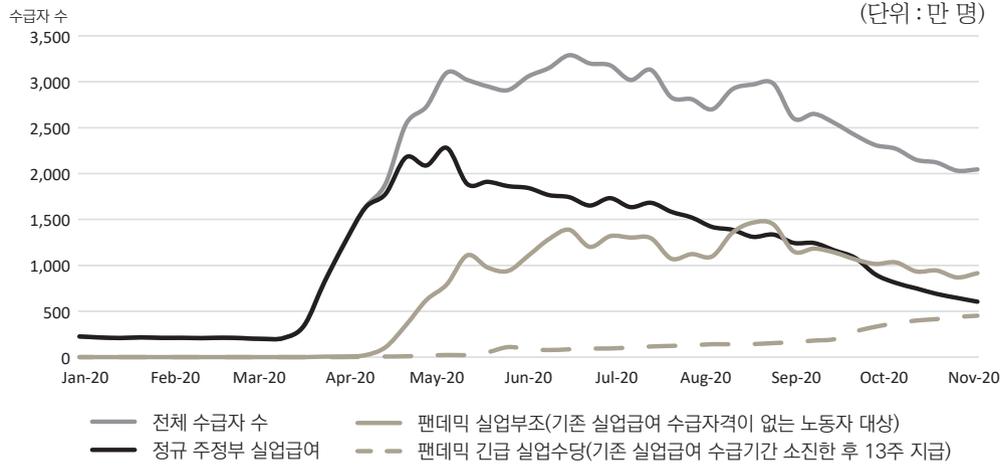
2020년 3월 말 실업급여 신청자는 1주일에 6백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월 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주당 20만 명이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그림 1 참조).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기에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20년 3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4월 말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그림 2 참조).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노동자들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주점처럼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소에 고용되

[그림 1] 1주간 주정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N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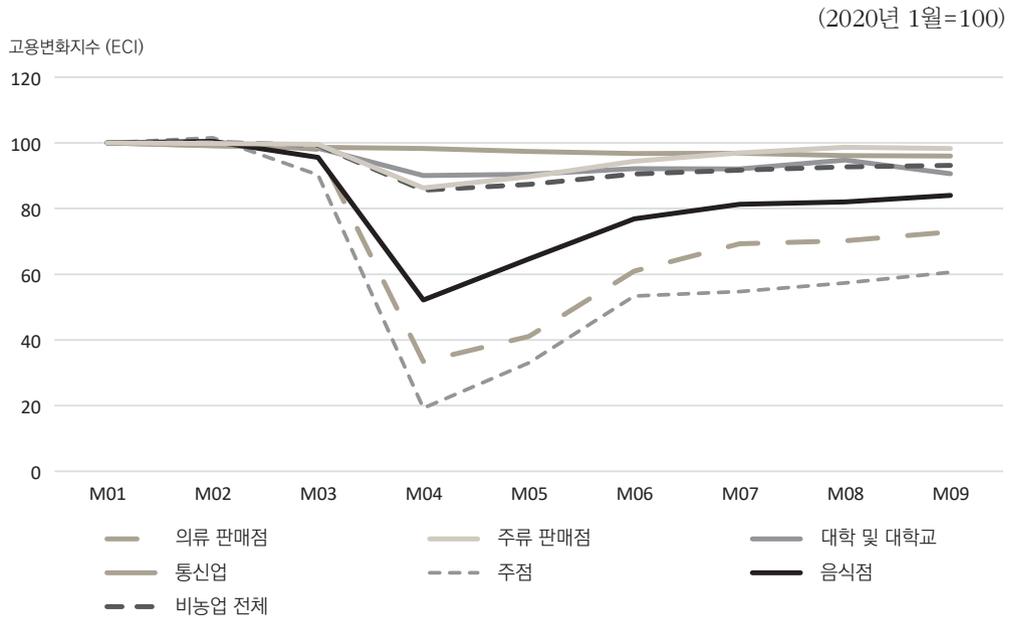
자료 :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Data, U.S. Department of Labor and Upjohn Institute.

[그림 2] 1주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전체 및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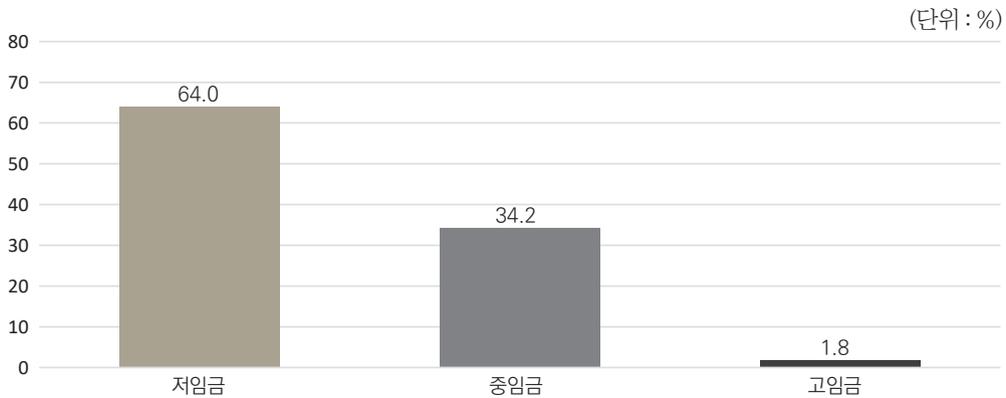
자료: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Data, U.S. Department of Labor and Upjohn Institute.

[그림 3] 주요 산업별 2020년 1월 이후 고용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4] 2020년 1~4월 노동자 유형별 고용손실 백분율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어 있던 이들이었다. 가상회의 플랫폼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같이 수요가 높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저숙련 노동자들은 고숙련 노동자보다 실직 가능성이 높았다.

■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의회는 실업급여 최초 신청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3주 전인 2020년 3월 4일 첫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승인하였으며, 의회는 4월이 끝나기 전에 모두 4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법안은 2020년 3월 27일에 입법화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 CARES) Act」으로, 예산 총액이 2조 2천억 달러(약 2,472조 1,400억 원)에 달한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인 2조 달러 규모의 CARES 법안은 “대규모로, 적시에, 개인, 기업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한다”²⁾라는

2) “Careful or careless? Perspectives on the CARES Act,” Grace Enda, William G. Gale, and Claire Haldeman, March 27, 2020, Brookings Institution, Accessed January 16, 2021.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CARES 법은 독립 계약자나 직 노동자와 같이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연간 근로소득이 7만 5,000달러(약 8,428만 원) 미만인 이들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단기 계약직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과 비영리 기관에도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양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며, 예산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2020년 여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는 듯하면서 전 국민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지만, 가을로 접어들자 확진자와 사망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늦가을과 겨울에는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활용도를 보이자, 미의회는 여러 재정지원 프로그램, 특히 CARES 법에 의한 프로그램들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의 5개월이 지나도록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른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0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규모는 민주당이 다수를 유지하는 하원에서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약 3조 달러(약 3,371조 1,000억 원) 규모 대신 상하원의 초당적 합의로 9천억 달러(약 1,011조 3,3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COVID Relief Deal)’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뤄낸 성과였다.

바이든 정부가 2021년 1월에 제안한 부양책은 추가되는 예산으로 2020년 12월 말 상하원이 합의한 부양책이 남겨 놓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2020년 5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를 지원대상에 따라 7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기업, 개인, 대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중보건, 교육, 연방 안전망 순서로 나타난다.

-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정의에 따라 5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소기업에 5차례의 법안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인 8,100억 달러(약 910조 1,970억 원)가 배정되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소기업청을 통해 최고 1천만 달러(약 112억 3,700만 원)의 대출상환 면제가 가능한 자금을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대출해 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 : PPP)’에 6,700억 달러(752조 8,790억 원)가 배정되었다. 활용도가 매우 높고 성공적으로 집행된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기관은 현재 대출상환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업무

를 대행한 시중 은행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는 소기업청 재해 대출과 기존 소기업청 대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있다.

- 두 번째 집단인 개인에게 7,480억 달러(약 840조 5,276억 원)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7만 5,000달러(약 8,428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15만 달러 (약 1억 6,855만 원) 미만인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금이며, 지급액 수준은 개인 1인당 또는 1가구당 1,200달러(약 134만 8,000원)에서 3,400달러(약 382만 원)에 이른다. 추가로 2,600억 달러(약 292조 1,620억 원)가 실업급여 인상과 확대에 사용되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기존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약 67만 4,000원)를 추가 지급하였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4개월이다. 또한 법으로 수급기간을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진 후 13주 동안으로 연장하였다(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팬데믹 실업부조(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통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 노동자 등과 같이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집단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사업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와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5,320억 달러(약 597조 8,084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당 대출은 상환 의무가 따르며 기업 공개 및 기타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또한 CARES 법을 비롯한 4개의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모든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세제 조정의 형태로 5,130억 달러(약 576조 4,581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 네 번째 집단은 병원과 지역보건기관으로 여기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와 보훈부(Veterans Administration)도 포함된다.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해 이 기관들에 총 3,380억 달러(약 379조 8,106억 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 및 의 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위해 선택 진료과목을 축소하는 경우 브릿지론(bridge loan)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및 연구에 260억 달러(약 29조 2,162억 원) 가 배정되었는데, 이 분야는 우선순위가 낮아서 4월에 통과된 마지막 법안에서야 250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그 이전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400억 달러의 자금이 편성되었다. 2,740 억 달러(약 307조 8,939억 원)는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위한 예산이며, 1,500억

달러(약 168조 5,550억 원)는 확진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그 외에, 아동 영양 프로그램, 푸드뱅크, 푸드 스탬프 제공을 위한 연방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을 이수 중인 학생의 팬데믹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700억 달러(약 78조 6,590억 원)가 배정되었다.

연방 재정활동을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구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BO)는 9월 재정 전망을 통해, 4차례의 경기부양법안과 다른 연방정부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2019년 1조 1,000억 달러(약 1,236조 700억 원)에서 2020년에 3조 3,000억 달러로 증가해 GDP의 16%에 이를 것이며, 1945년 이후 경제규모 대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 또한 연방정부의 공공부채도 2020년에 GDP의 98%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2019년 연방정부 부채비율은 79% 수준이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제위기 전인 2007년에는 35% 수준이었다), 나아가 2021년에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2023년에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107%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긴 하지만 부채를 추가하기에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다. 금리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림 5]에 의하면 부채상환 비용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재닛 옐런(Janet Yellen)도 이에 동의한다. 재닛 옐런은, 미국의 저금리 환경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부채 상환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오랜 기간 더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경제에 장기적으로 상처를 남길 것이다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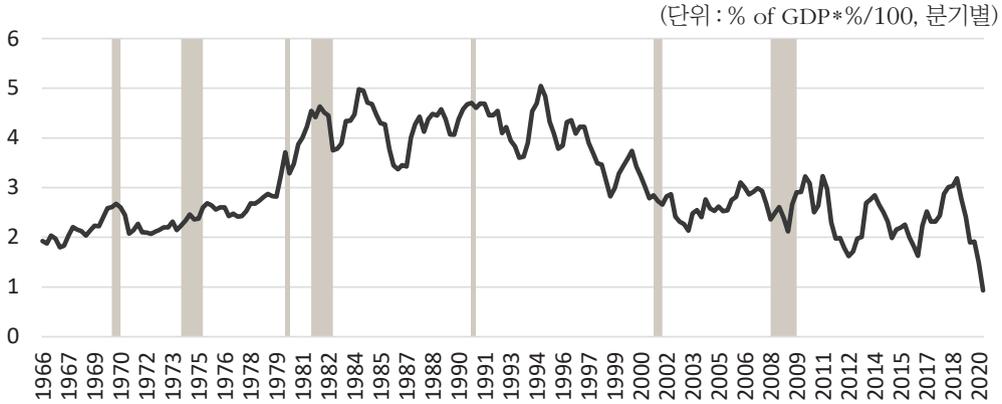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와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가 공동 저자로 2020년 10월 미국의학협회 학술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7조 6,000억 달러(약 8,540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⁵⁾ 그리고 코로나19가 감염자들의 건

3)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 2020~2030,”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eptember 2020.

4) 2021년 1월 19일, Janet Yellen의 상원 재정위원회 증언.

5) David Cutler and Lawrence Summe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16 trillion Virus,”

[그림 5] 연방부채 상환 비용(1966~2020)



주: 연방부채: GDP 대비 백분율로 표기한 부채총액×미재무부 채권 10년물 고정 만기수익률/100.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생명 가치를 추산한 금액이 8조 4천억 달러(약 9,439조 800억 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3조 3,000억 달러(3,708조 2,000억 원)라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책의 규모는 16조 달러(1경 7,979조 2,000억 원)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비용에는 근접도 못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12월 추가 경기부양책에 책정된 9천억 달러(약 1,011조 3,300억 원)를 더하더라도 커틀러와 서머스가 추산한 팬데믹 비용과 비교하면 여전히 1/4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산집행을 추적하는 사이트(covidmoneytracker.org)에 의하면, 2020년 12월 22일 현재, 미의회가 책정한 4조 7천억 달러의 예산 중에서 63%만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채권 및 자산매입에 활용하도록 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의 경우에는 34%만이 실제 사용되었다. 반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책정해 둔 자금은 대부분 집행 및 지급되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직접지원 예산은 97%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Viewpoi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ctober 12, 2020, 324(15): 1495~96. 저자들에 의하면, GDP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의 GDP가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누적 효과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실질 GDP는 연간 기준으로 33% 가까이 하락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양책은 2020년 12월에 발표된 부양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약 2,135조 3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에는 12월 상하원이 합의한 9천억 달러(약 1,011조 3,3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COVID Relief Deal)’에 이미 포함된 1인당 600달러(약 67만 4,000원) 현금 지급에 추가로 1,400달러(약 157만 3,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1인당 총 2,000달러(약 224만 7,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는 기존 법에 따라 이미 지급기간이 종료된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범위도 독립 계약자와 자영업자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정을 공급하여 백신 비용과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어떠한 추가 지원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바이든 대통령의 노동의제

바이든 대통령의 노동의제는 산업안전보건 강화, 진보적인 노동입법, 더욱 노조 친화적인 연방노동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 운영을 담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고 하원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담은 일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마티 월시(Marty Walsh)는 노조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후원자이다. 마티 월시는 과거 노조 실무자로 활약하다가 철강노동자와 전기기술자를 대변하는 보스턴 건설업노조(Boston's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지도부에 올랐고, 2013년부터는 보스턴 시장을 역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저임금, 임금 평등, 친노동자 및 친

노조 정책, 차별금지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여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는 이러한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수개월 내에 의회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안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 평등과 유급휴가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임금 격차의 이유가 '성별 외 요소'에 의한 경우라면 여성 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차이의 근거를 교육, 훈련 또는 경력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요소들로 한정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차별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주가 직원들이 직장 동료와 임금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의회는 고용주의 유급 가족휴가 및 병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가장 근접한 경우로는 가족 및 질병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연방법은 없다.⁶⁾ 바이든 대통령은 최장 12주의 유급 가족휴가 및 병가 부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은 수년간 변동이 없이 7.25달러(약 8,100원)를 유지하고 있다. 29개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고, 최저임금이 연방요율보다 낮은 2개 주와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지 않은 5개 주에 대해서는 연방요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14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연간 2주

6) 4개 주(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워싱턴)에서는 현재 유급 가족휴가 부여가 고용주의 의무로 정해져 있다. 뉴욕은 2016년에 「유급가족휴가급여법(Paid Family Leave Benefits Law)」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워싱턴 DC는 보편적 유급가족휴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7년 2월에 법으로 제정되어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풀타임 노동자의 연소득은 1만 4,500달러(약 1,629만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 6,800원)로 인상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임금에 팁을 포함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초과근무 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최저 연소득 기준을 인상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거의 조치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6년 규정에 따라 당시 초과근무 수당 적용 제외 최저 연소득은 2만 3,660달러(약 2,659만 원)에서 4만 7,476달러(5,335만 원)로 인상된 바 있다.

노사관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계층의 미래와 그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거대 사용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역량은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조직률을 극적으로 높이고 경제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는 내각 차원의 전담 실무진을 구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노사관계위원회의 위원 5명 중 친기업 성향의 위원 2명을 교체하고 올해 말에 임기를 마칠 또 다른 위원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노사관계위원회가 노조친화성이 더 강한 기구로 바뀌면, 노조 설립 시 직원들로부터 직접 대표권을 위임받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⁷⁾를 부여하고 이전 행정부에서 이행되었던 연방노사관계위원회의 결정과 규정을 철회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또한, 이른바 「단결강제금지(right to work)법」⁸⁾을 금지하고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

7) 편집자 주: 노동자 과반수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카드를 받은 경우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의 노동조합 인증 선거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카드체크(Card Check) 제도를 의미한다.

8) 편집자 주: “right to work”를 문자 그대로 “근로권” 혹은 “노동권”으로 번역하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제32조) 또는 노동3권(제33조)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right to work”법은 그런 종류의 법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다. 근로자 개인의 고용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강제(이른바 유니언숍)를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글에

없이 노조의 대표성으로 혜택을 받는 모든 노동자로부터 조합비를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분주한 시기

새로운 행정부가 수립되고 처음 100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법안과 행정명령을 추진하면서 미의회는 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하원이 최근에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당 난입을 둘러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하면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미국 전역에 확산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부양책 입법화를 미의회에 요청하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속도가 관건이므로,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리면서 시작이 늦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로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상원은 마비 상태였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도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의석 2석을 차지하면서,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로 양분하게 되어 교착상태가 되면 부통령이 결정권(tie-breaking vote)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일이 2021년 초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자신의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KLI**

서는 그 내용에 따라 “단결강제금지”로 번역한다.